보 고 자 료

‘11년 부패인식 · 경험 조사결과

2011. 12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Ⅰ. 조사 개요 / 1

Ⅱ. 부패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 / 2

Ⅲ. 부패경험에 대한 조사 분석 / 15

Ⅳ.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20

Ⅴ. 종합분석 및 시사점/ 22

Ⅰ 조사 개요

구 분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전문가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400명)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외부감사 대상기업 임원 (700명)	주한 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교수 (400명)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문화예술인, 종교인 (630명)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Fax/E-mail 조사 병용			
신뢰수준 (95%)	±2.62%P	±2.62%P	±3.63%P	±4.90%P	±3.90%P
조사기간	11월 5일 ~ 11월 21일	11월 4일 ~ 11월 21일	10월 26일 ~ 11월 17일	10월 27일 ~ 11월 25일	11월 1일 ~ 11월 18일
조사기관	(주)월드리서치				

※ 부패인식점수 산출방식 (1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항목별 응답유형	10점 환산점수	부패인식점수 산출식
매우부패	0.0	$\sum_{i=1}^{\infty} \frac{\text{환산점수} \times \text{사례수}}{\text{전체사례수}}$
부패한편	2.5	
보통	5.0	
별로 부패하지 않음	7.5	
전혀 부패하지 않음	10.0	

Ⅱ 부패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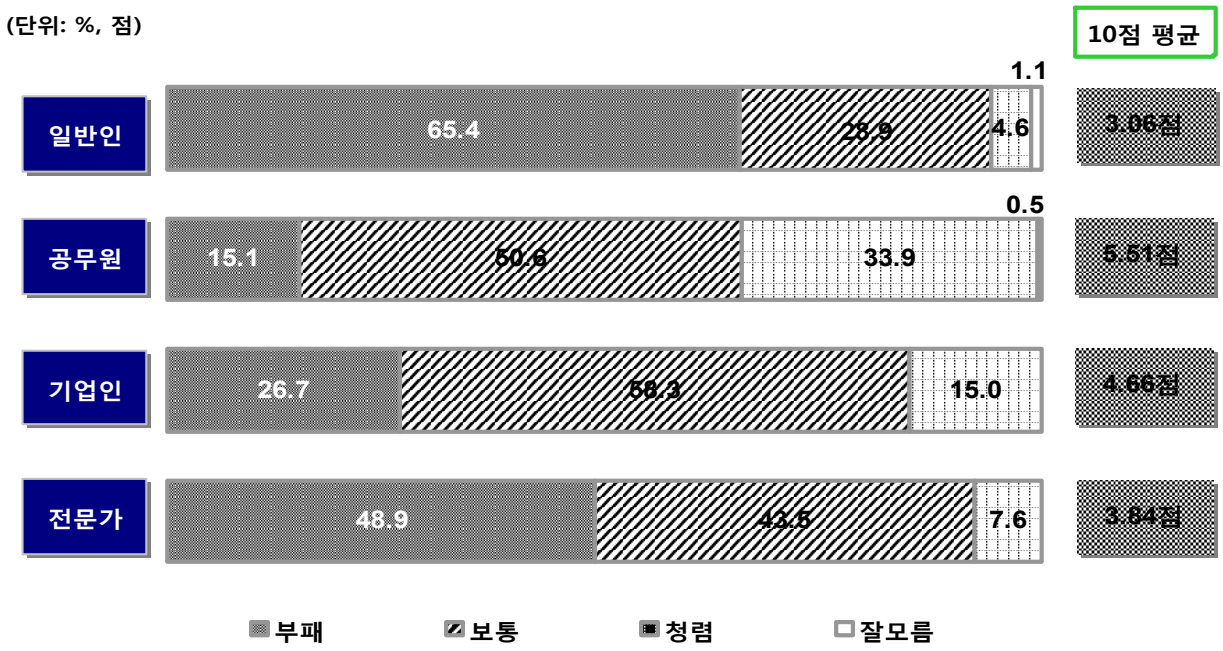
1.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65.4%), 전문가(48.9%), 기업인(26.7%), 공무원(15.1%) 순으로 높음

-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일반국민(3.06점), 전문가(3.84점), 기업인(4.46점), 공무원(5.51점) 순으로 일반국민·전문가 보다 **기업인·공무원**이 우리 사회를 **청렴하다고 인식**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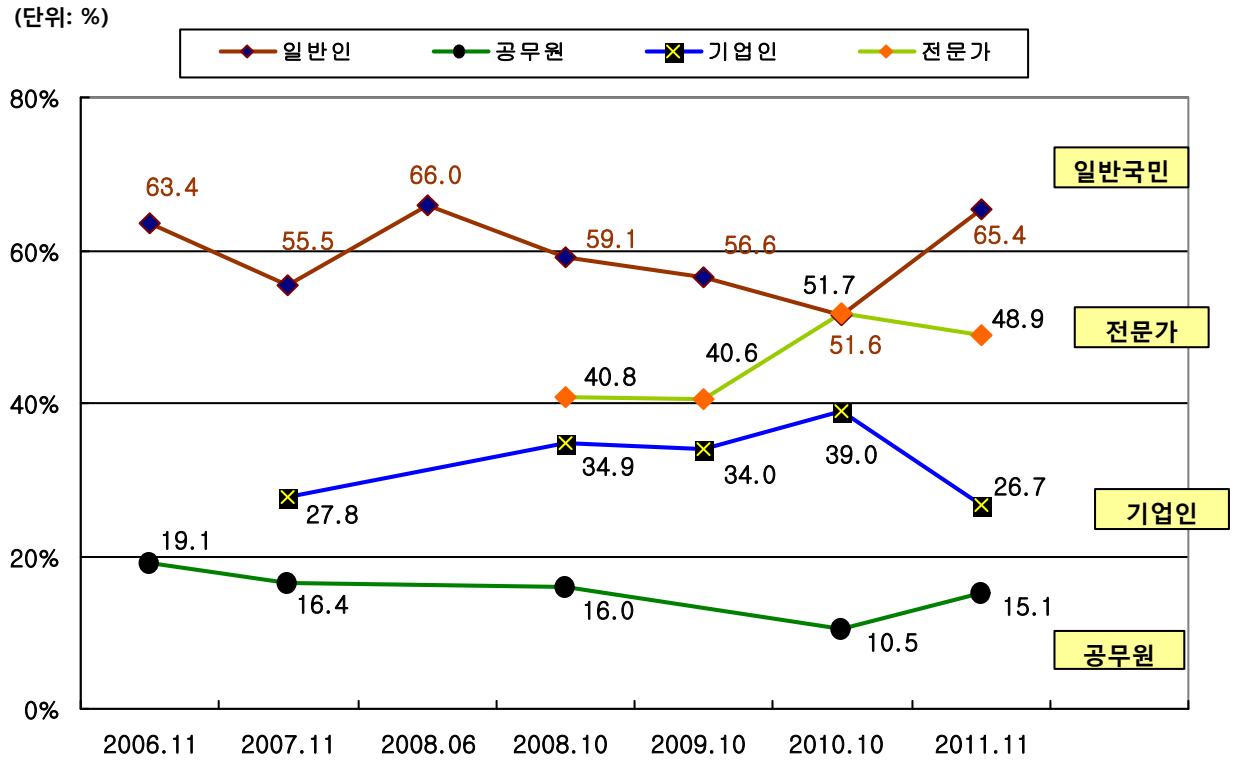
○ **일반국민·공무원**의 부패인식은 전년보다 **악화**되었고, **기업인·전문가**는 전년보다 **개선**

- **일반국민**의 경우,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13.8%p(51.6%→65.4%)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악화**

※ 59.1%('08년) → 56.6%('09년) → 51.6%('10년) → 65.4%('11년)

- **기업인**의 경우,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12.3%p(39.0%→26.7%) 감소하여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개선**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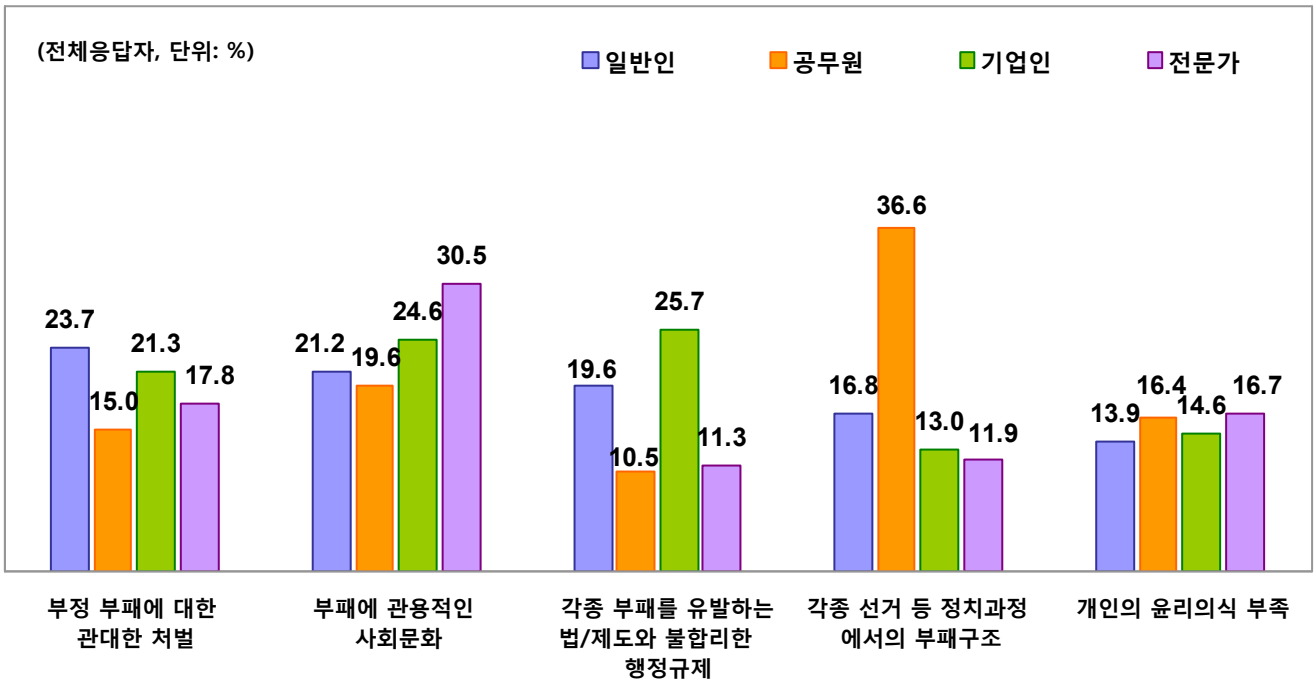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63.4	55.5	59.1	56.6	51.6	**65.4**	**+13.8%p**
	공무원	19.1	16.4	16.0	-	10.5	**15.1**	+4.6%P
	기업인	37.0	27.8	34.9	34.0	39.0	**26.7**	**△12.3%p**
	전문가	-	-	40.8	40.6	51.7	**48.9**	△2.8%p
부패인식 점수 (10점만점)	일반국민	3.04	3.48	3.25	3.42	3.68	**3.06**	**△0.62점**
	공무원	5.39	5.95	5.56	-	5.97	**5.51**	**△0.46점**
	기업인	4.19	4.71	4.49	4.42	4.23	**4.66**	+0.43점
	전문가	-	-	4.13	4.20	3.75	**3.84**	+0.09점

□ 부패발생 원인 및 분야별 부패수준

○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3.7%)**, **공무원**은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36.6%)**, **전문가**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30.5%)**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하였고 **기업인**은 **'불합리한 행정규제'(25.7%)**를 지목

〈 부패발생 원인 〉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을 비롯한 전 계층에서 모두 **'정당 및 입법분야'**의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

〈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

(%)	정당 및 입법	행정 기관	사법 분야	공기업	언론 분야	교육 분야	종교 분야	민간 기업	시민 단체	노동 단체	문화 예술 체육
일반국민	54.2	30.3	25.4	22.5	11.1	8.4	7.1	5.2	4.1	3.9	1.4
공무원	61.0	11.2	25.6	20.6	31.5	8.0	8.4	9.2	4.2	3.0	4.0
기업인	63.3	29.0	22.9	26.7	17.7	7.3	10.9	5.3	6.0	4.1	1.6
전문가	81.9	31.3	38.7	21.4	25.1	17.0	20.0	18.6	7.8	3.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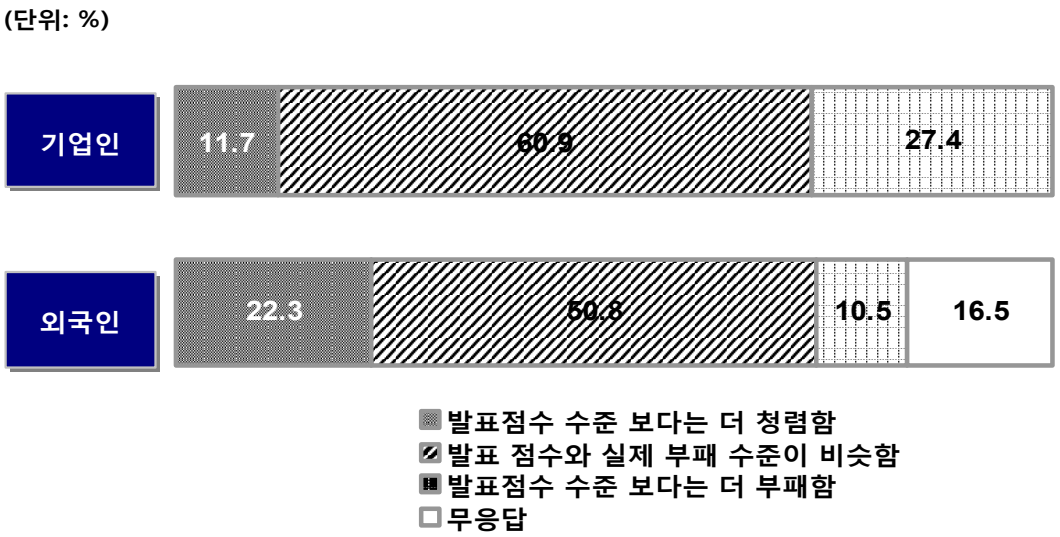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지수와의 비교 (기업인, 외국인)

○ **기업인**은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178개 국가 중 39위, 5.4점/10점 만점) 대비 한국이 실제 더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27.4%임**

○ **외국인**은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대비 청렴하다는 인식이 22.3%였음

○ **기업인**에 비해 **외국인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대비 우리사회를 **더 청렴하게 인식**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지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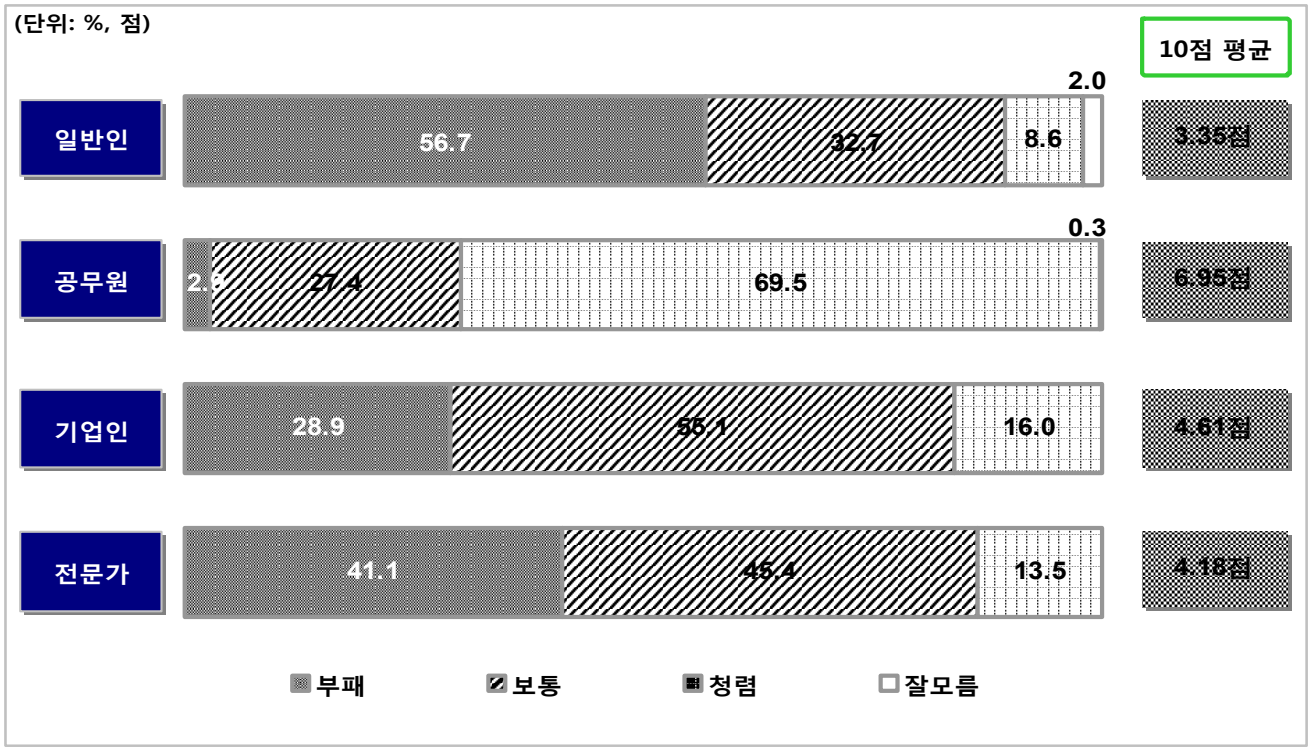
2.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공직사회 부패수준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은 **56.7%**, **전문가**는 **41.1%**, **기업인**은 **28.9%**인데 반해 **공무원**은 **2.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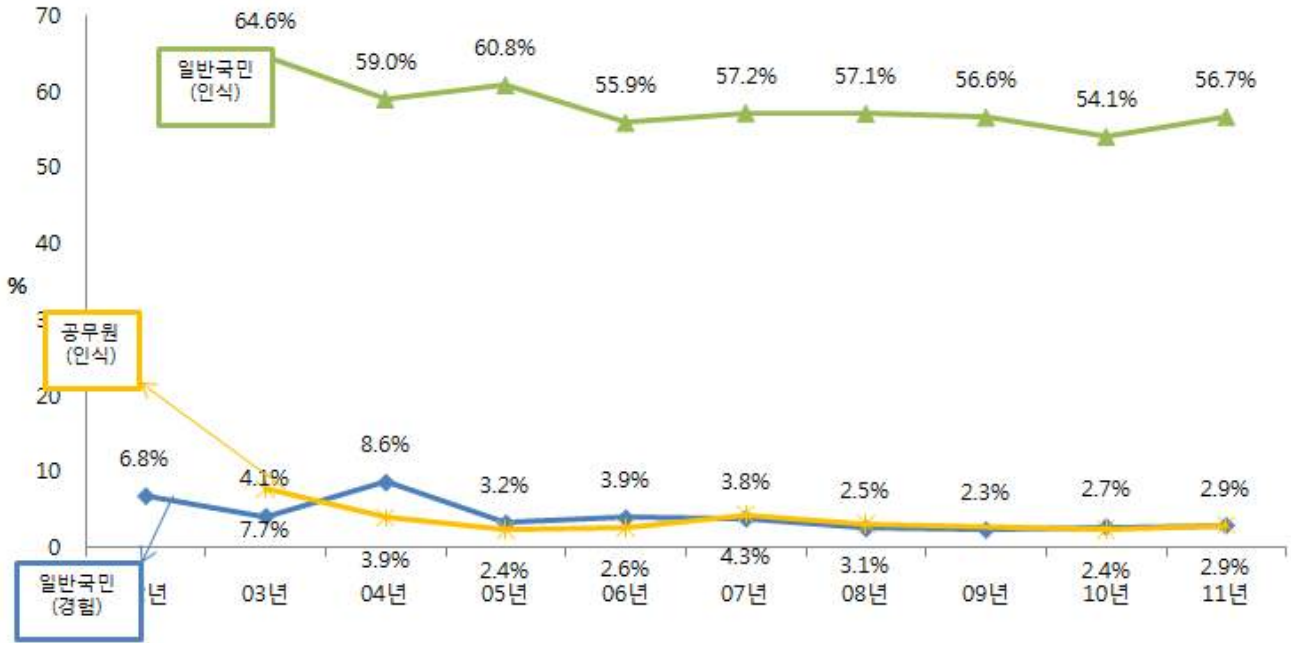
- 1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하여 일반국민(3.35점), 전문가(4.18점), 기업인(4.61점)과 공무원(6.95점)사이에 매우 큰 **인식격차 존재**

〈 공직사회 부패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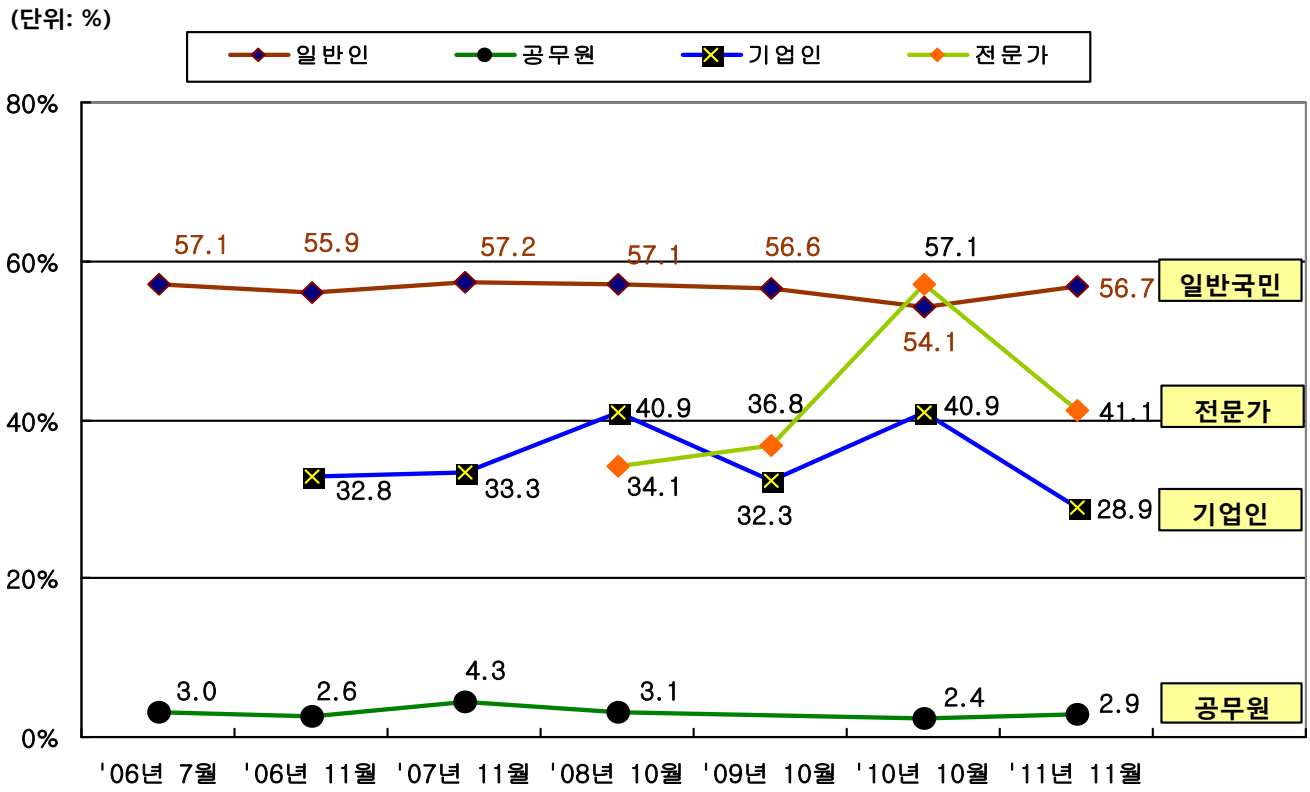
- 특히 일반국민의 부패경험 추세와 공무원의 부패인식 추세 사이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 추이 〉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년에 비해 소폭 **악화**되었으나 **기업인·전문가** 등은 크게 **개선**

〈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추이 〉



〈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추이 〉

(단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64.6	59.0	60.8	55.9	57.2	57.1	56.6	54.1	56.7	**+2.6%p**
	공무원	7.7	3.9	2.4	2.6	4.3	3.1	-	2.4	2.9	**+0.5%p**
	기업인	-	26.0	-	32.8	33.3	40.9	32.3	40.9	28.9	**△12.0%p**
	전문가	-	-	-	-	-	34.1	36.8	57.1	41.1	**△16.0%p**
부패인식 점수 (10점평균)	일반국민	2.85	3.14	2.97	3.29	3.28	3.25	3.26	3.49	3.35	**△0.14점**
	공무원	6.66	7.37	7.72	7.65	7.64	6.93	-	7.19	6.95	**△0.24점**
	기업인	-	5.18	-	4.51	4.65	4.18	4.63	4.06	4.61	**+0.55점**
	전문가	-	-	-	-	-	4.44	4.37	3.52	4.18	**+0.66점**

□ 공직사회가 '부패' 하다고 인식하게 된 경로와 이유

○ 일반국민·공무원·기업인·전문가 대부분이 직접적인 체험·판단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

(단위:%)

항 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전문가
언론·인터넷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63.0	72.5	58.9	46.7
가족/동료/지인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9.6	15.0	26.2	24.3
직접적인 경험/인식에 기초하여	15.6	10.0	14.4	26.6
책자, 논문, 분석자료 등을 통해서	0.8	2.5	0.5	2.3
기타/무응답	1.0	-	-	-

※공무원이 '부패하다' 고 평가한 응답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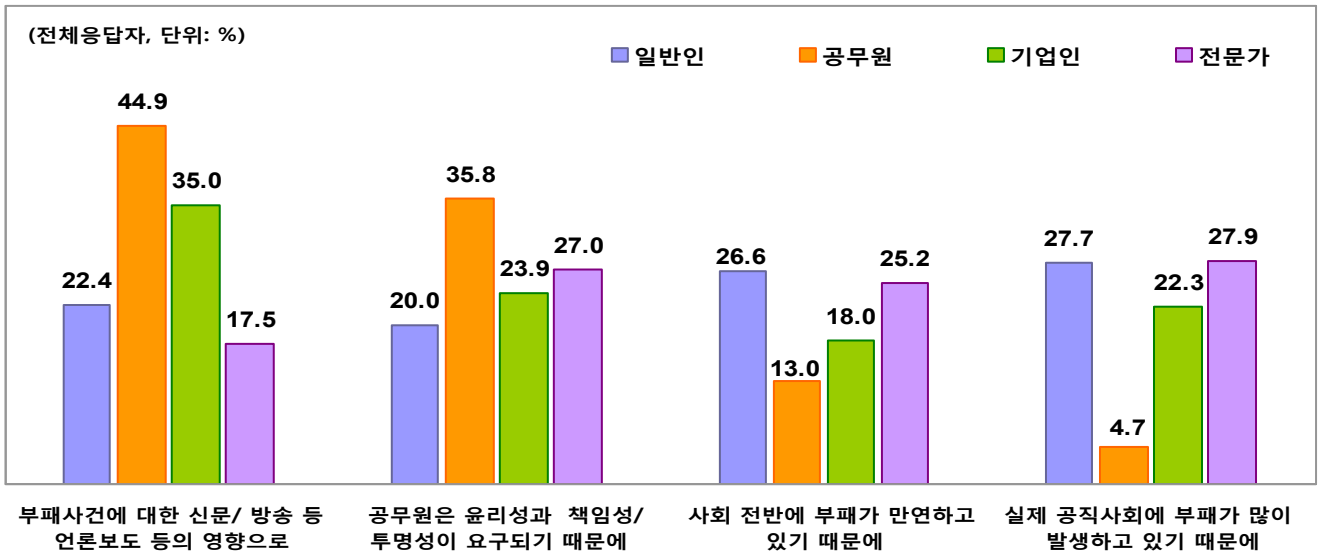
○ **공직사회가 부패**다고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 **일반국민**은 **'실제 공직사회 부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27.7%) 및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26.6%) 등의 순으로 보고 있음

- **전문가는 '실제 부패 발생'**(27.9%) 및 **'공무원에게 윤리적 자질이 요구'**(27.0%) 되기 때문이라고 인식

○ **공무원·기업인**은 실제로 부패가 증가 했다기 보다는 **'언론/인터넷 보도의 영향'**(공무원: 44.9%, 기업인: 35.0%)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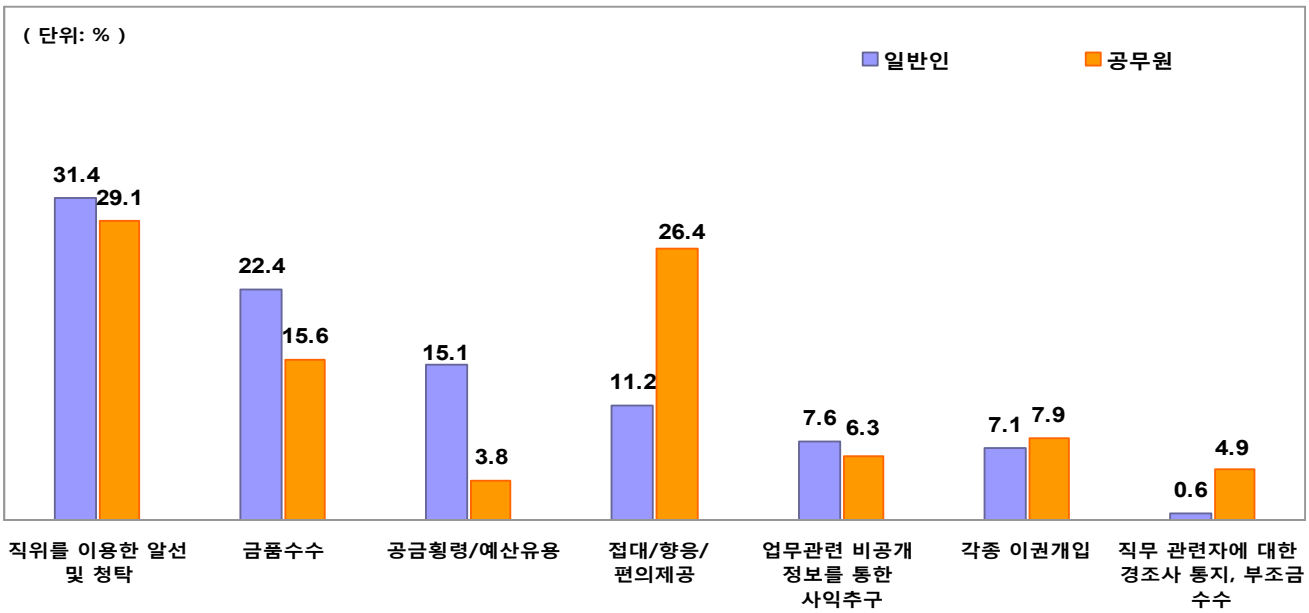


□ 부패유형, 부패유발 주체 및 분야별·계층별 부패수준

○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에 대해 **일반국민**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 이라고 응답하였고, **'금품수수'**(22.4%), **'공금횡령·예산유용'**(15.1%)이 뒤를 이음

○ **공무원** 역시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29.1%)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라고 응답하였고, **'접대·향응·편의제공'**(26.4%), **'금품수수'**(15.6%)가 뒤를 이음

〈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



○ 가장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공무원** 모두 **'중앙행정기관 본청'**이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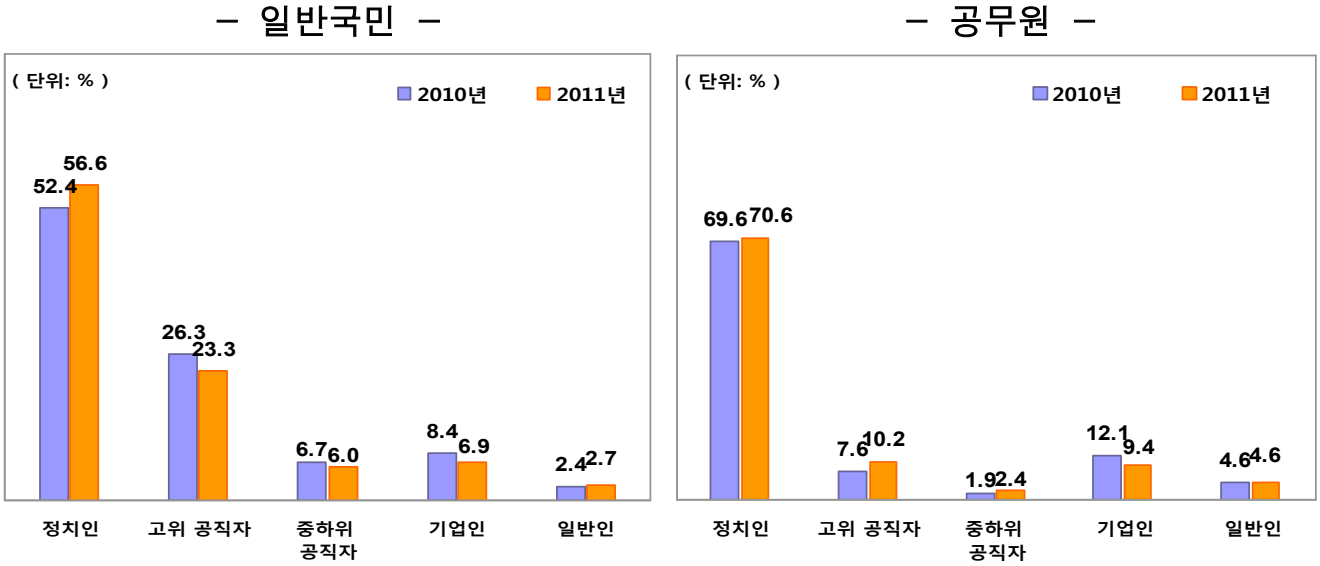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전년 대비 비교 〉

(단위:%)

구 분	일반국민			공무원		
	'10년	'11년	전년대비	'06년	'11년	06년대비
중앙행정기관 본청	26.4	**33.3**	+6.9%p	26.3	**35.9**	+9.6%p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지방관청	19.1	20.2	+1.1%p	19.1	12.0	△7.1%p
기초자치단체	18.4	16.6	△1.8%p	26.0	21.8	△4.2%p
광역자치단체	16.9	10.7	△6.2%p	12.3	10.1	△2.2%p
지방교육청	9.4	6.2	△3.2%p	-	-	-

○ **부패유발 주체**에 대해 일반국민·공무원 모두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 70.6%)과 **고위 공직자**(23.3%, 10.2%)를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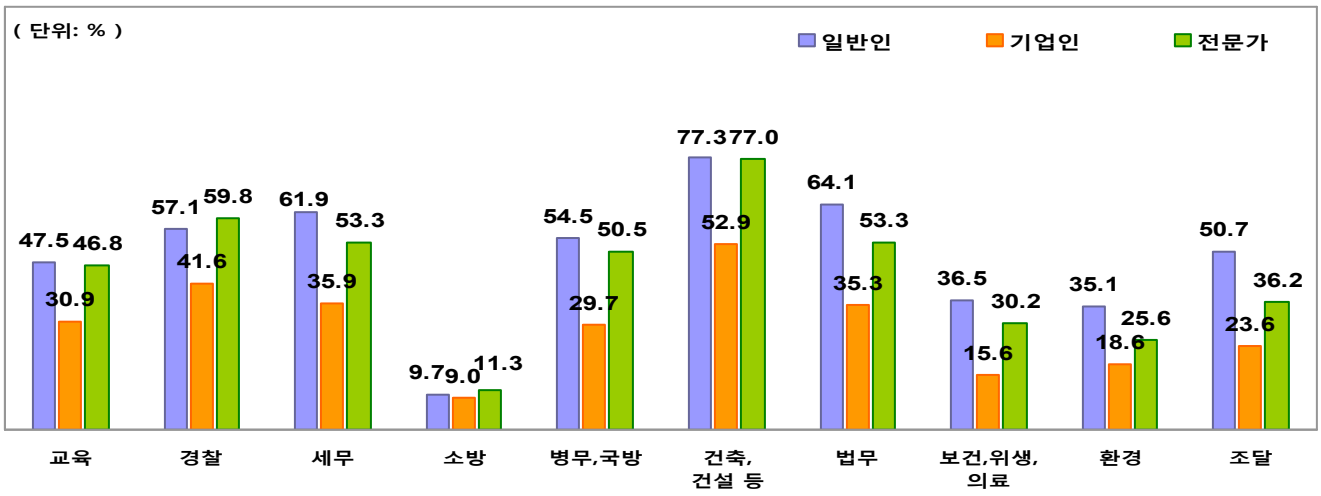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부정부패 유발주체 추이 〉



○ 행정분야 별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전년도와 비교하여 경찰(16%p), 조달(11.9%p), 세무(11.4%p), 환경(11.1%p), 법무(10.2%p)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되는 등 **소방 분야(△2%p)**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대부분의 인식이 악화**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단위: %)

부패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1	건축/건설/주택/토지	77.3	건축/건설/주택/토지	52.9	건축/건설/주택/토지	77.0
2	검찰/교정/출입국 관리 등 법무	64.1	경찰	41.6	검찰/교정/출입국 관리 등 법무	59.8
3	세무	61.9	검찰/교정/출입국 관리 등 법무	35.9	세무 및 법무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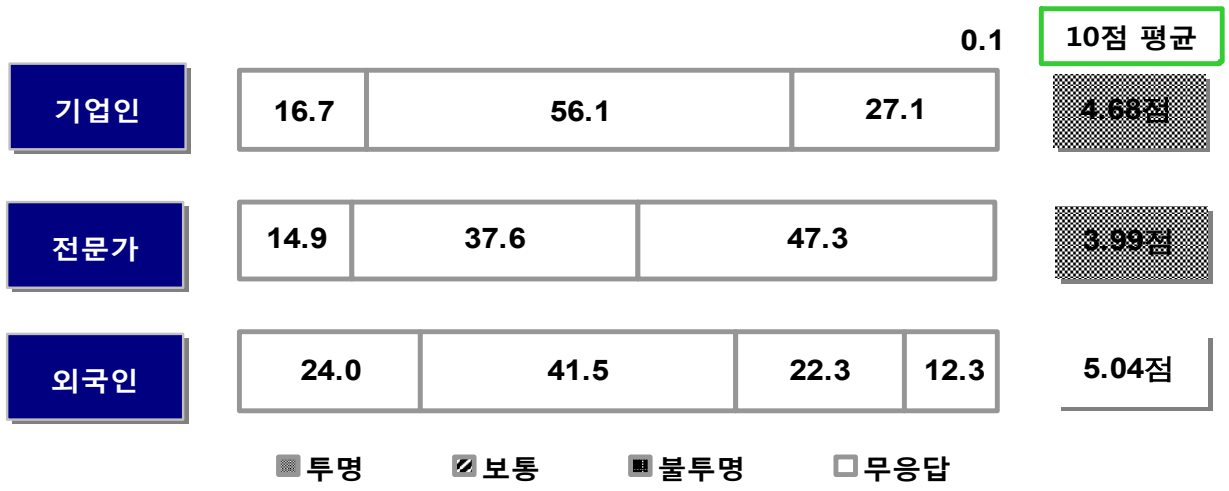
3. 정부정책에 대한 투명성 평가

□ 기업 관련 정책의 투명성 수준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투명하다'**는 응답비율은 **외국인(24.0%), 기업인(16.7%), 전문가(14.9%)** 순으로 높음

-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외국인(5.04점), 기업인(4.68점), 전문가(3.99점) 순으로서 **외국인**이 기업인·전문가보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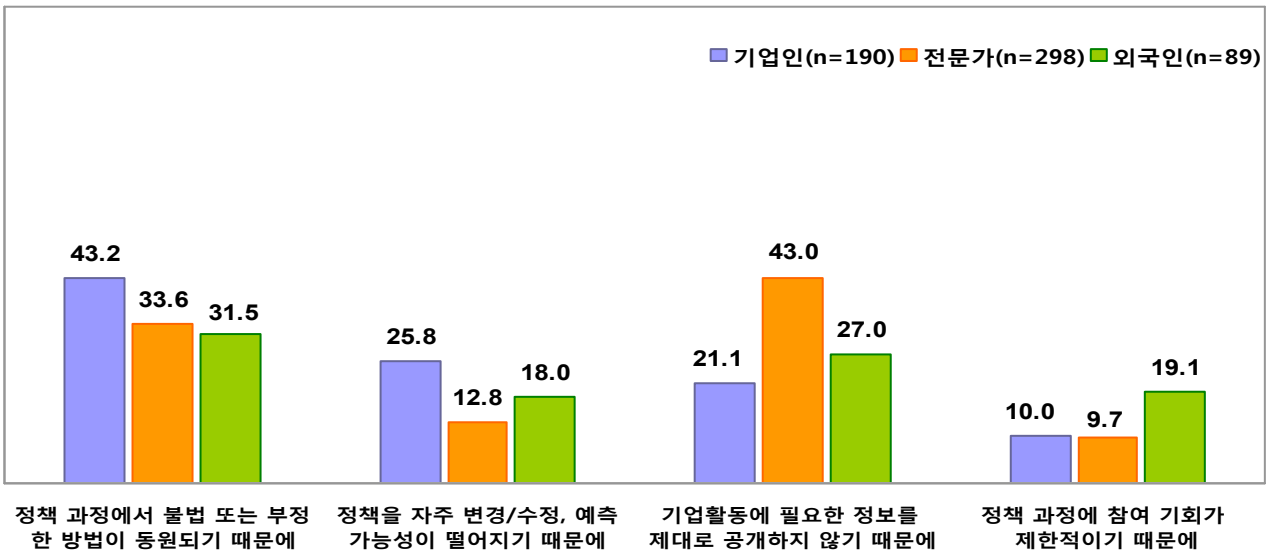
〈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 투명성 평가 〉



□ 저평가 이유와 인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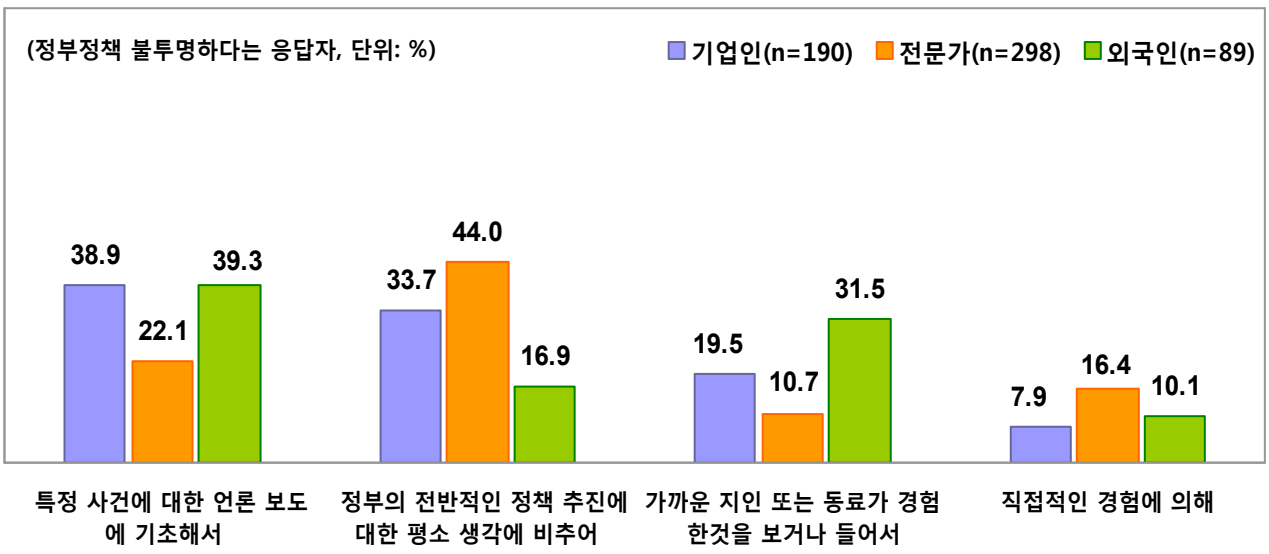
○ 기업인·외국인은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이 '불투명'한 이유로 **'정책 과정에서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43.2%)**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전문가**는 **'정보공개 미흡'(43.0%)**때문이라는 인식이 높음

〈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 투명성 저평가 이유 〉



○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게 된 것은 **'매스컴의 영향'(기업인 38.9%, 외국인 39.3%)**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는 **'평소 생각'에 비추어(44.0%)**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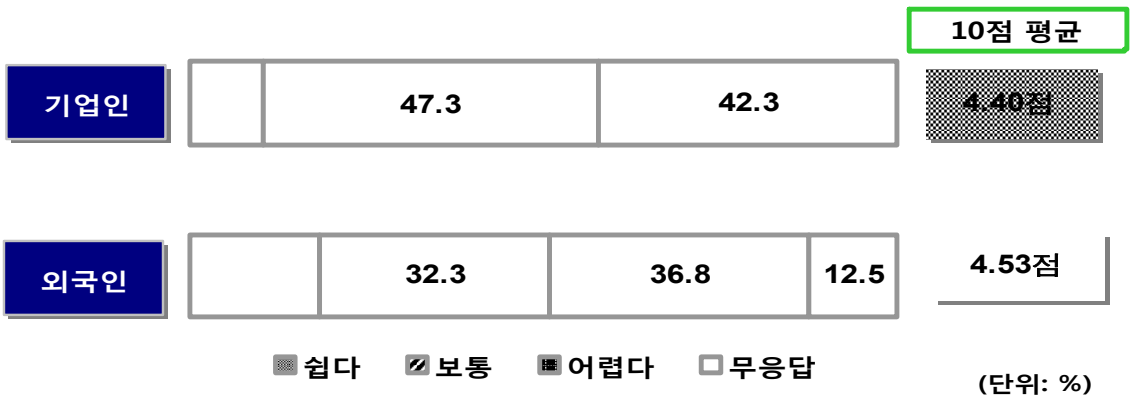
〈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 투명성 저평가 이유(경로) 〉



□ 기업관련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성(기업인, 전문가)

○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기업인**은 **42.3%**, **외국인**은 **36.8%**로 **외국인**이 기업인보다 정보획득 용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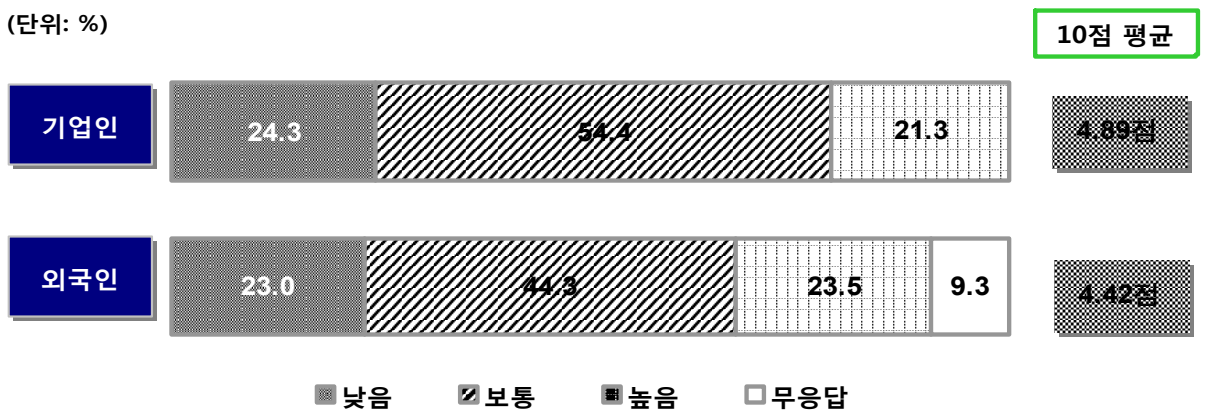


□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기업인, 외국인)

○ **기업인**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높다'**는 인식에 비해 **3.0%p 높음**

○ **외국인**은 윤리경영 수준이 **'낮다'**는 인식과 **'높다'**는 인식이 **비슷**

〈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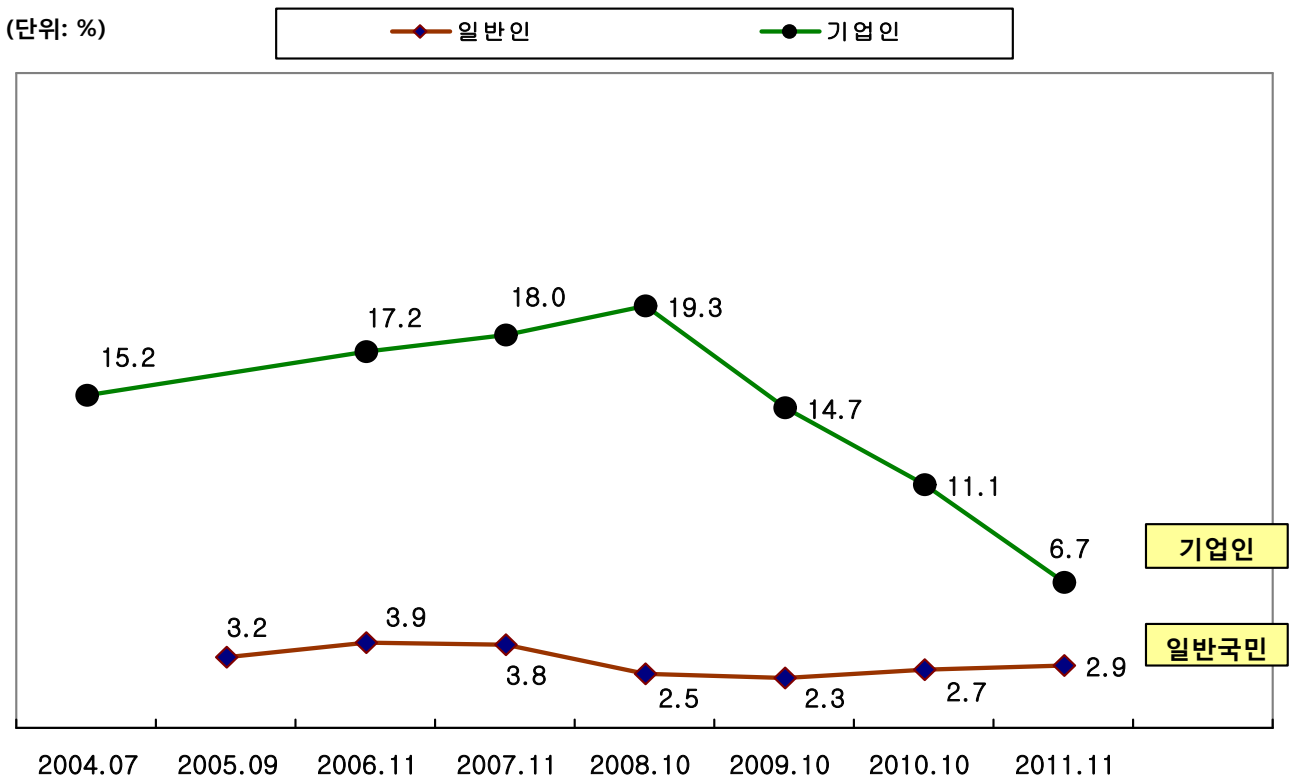
Ⅲ 부패경험에 대한 조사 분석

□ 금품 · 향응 제공 경험(일반국민, 기업인)

○ 지난 1년간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기업인(6.7%)**의 경우 **외국인(0.5%), 일반국민(2.9%)**보다 **높게** 나타남

- 하지만 **기업인**의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은 '0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어 **공무원와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가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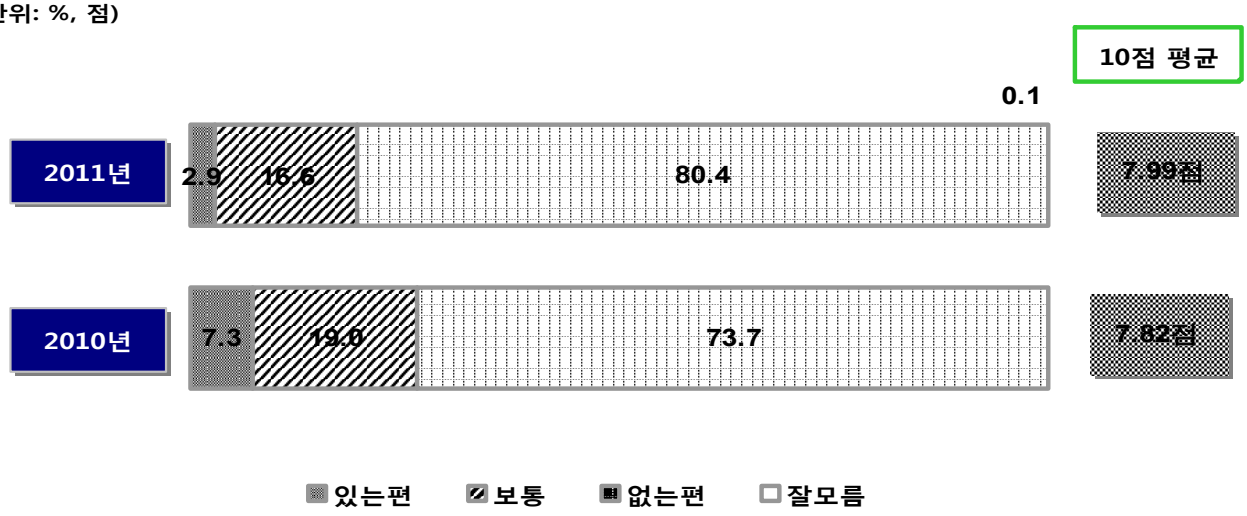
〈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 추이 〉



- 또한 **기업인**은 **업무상 뇌물·향응제공 등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응답비율은 80.4%로 전년보다 6.7%p **증가**하여 **기업경영**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음

〈 업무상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 〉

(단위: %, 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요청받은 경험이 낮음을 의미)

○ **일반국민**의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은 '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09년 이후 **증가추세**

-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 연령층에서의 **부패경험**이 **6.4%**로 전체 평균(2.9%)을 크게 상회

- **직업별**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은 **고용주(10.5%), 자영업자(8.3%)**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7.2%)**에서 가장 **많았음**

〈 직업별 · 소득별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

직업별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		소득별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	
고용주	**10.5%**	200만원 미만	1.0%
자영업자	8.3%	200만원 ~300만원 미만	3.9%
임금근로자	3.2%	300만원 ~500만원 미만	2.6%
가족 종사자	3.5%	**500만원 이상**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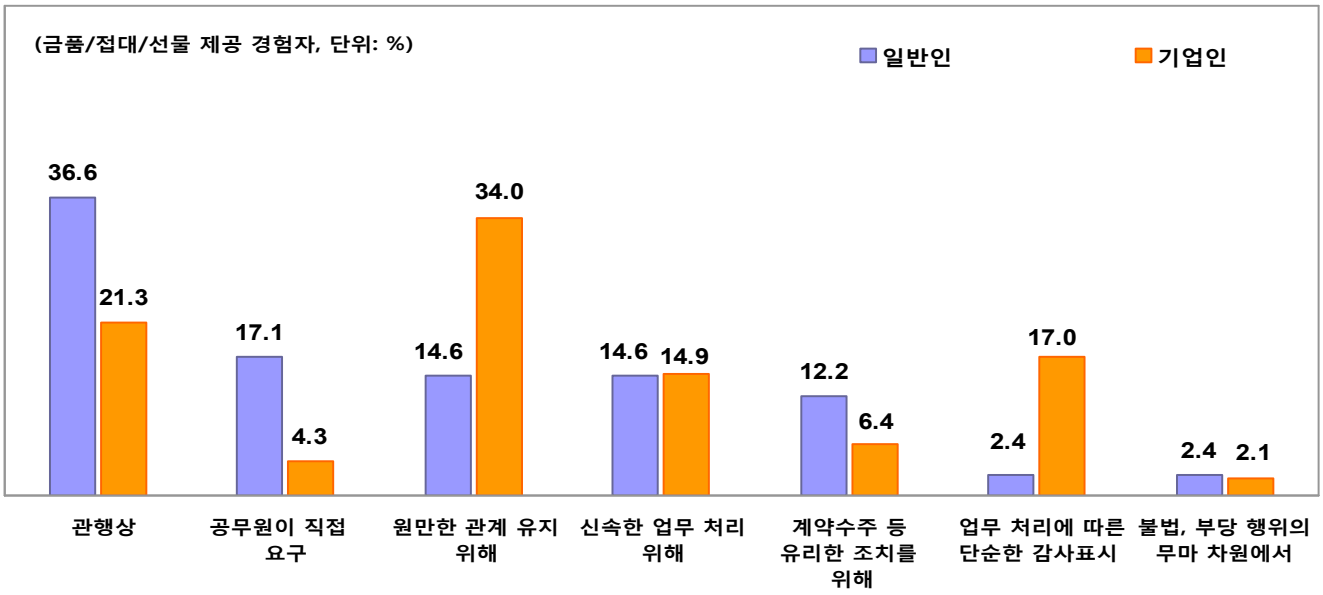
□ 금품 · 향응 등의 제공동기(일반국민, 기업인)

○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로 **일반국민**은 **'관행에 의해서'(36.6%)**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업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령대 별로는 **50세 이상에서 '관행에 의해서'**라는 응답(60%)이 많았음

○ 전년대비, 일반국민은 '관행에 의해서'(28.9%→36.6%, +7.7%p), 기업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21.8%→34.0%, +12.2%p)가 가장 많이 증가

〈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 〉



〈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 〉

구 분	일반국민 (%)			기업인 (%)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0년	전년대비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	**28.9**	**36.6**	**+7.7%p**	33.3	21.3	△12.0%p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10.5	17.1	+6.6%p	7.7	4.3	△3.4%p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18.4	14.6	△3.8%p	**21.8**	**34.0**	**+12.2%p**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18.4	14.6	△3.8%p	5.1	14.9	+9.8%p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10.5	12.2	+1.7%p	2.6	6.4	+3.8%p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0.5	2.4	△8.1%p	19.2	17.0	△2.2%p
혹시 있을 불법/부당행위 무마차원	2.6	2.4	△0.2%p	6.4	2.1	△4.3%p

□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일반국민, 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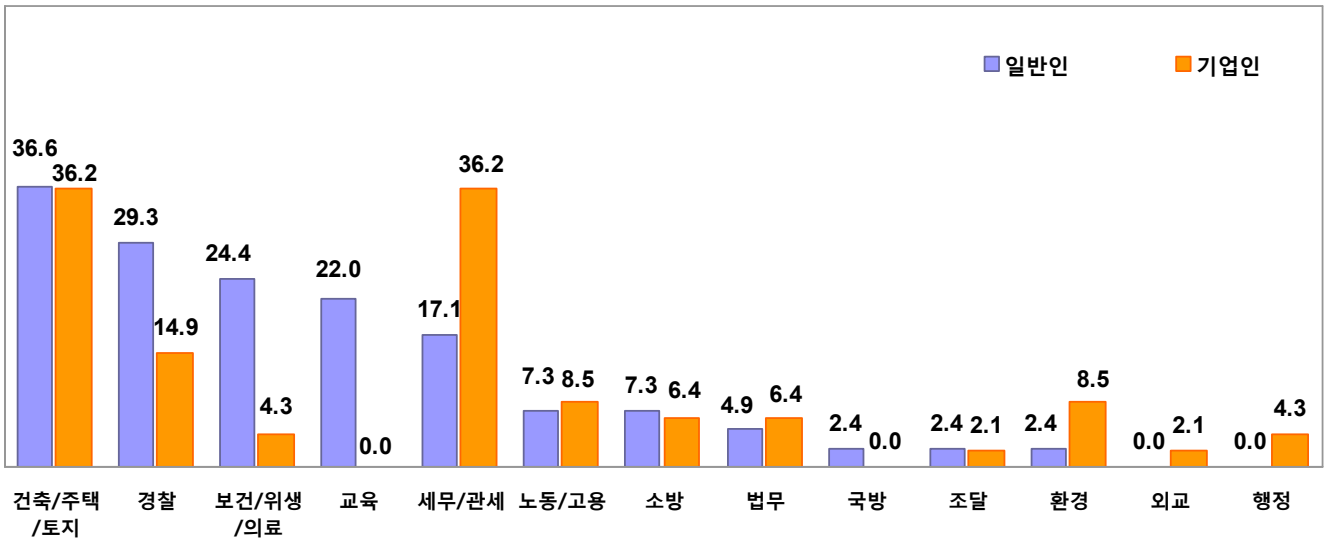
○ **일반국민**의 경우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한 업무분야로는 **'건축/주택/토지' 분야**가 **36.6%**로 가장 높았음

- **'건축/주택/토지'**분야는 **일반국민**의 **부패인식**(77.3%) 뿐 아니라 **부패경험**(36.6%)에서도 **가장 높은 업무분야**로 나타남

○ **기업인**의 경우 **'건축/주택/토지'분야**와 **'세무/관세'** 분야가 가장 높았음

- **일반인·기업인** 모두 **건축/주택/토지** 분야에서 금품 등의 제공 경험이 많았으나, **기업인**은 **세무/관세** 분야에서도 금품 등의 제공 경험이 많이 나타났음

〈 금품/접대/선물 제공한 업무분야 (복수응답) 〉



〈 금품 등을 제공한 업무분야 추이(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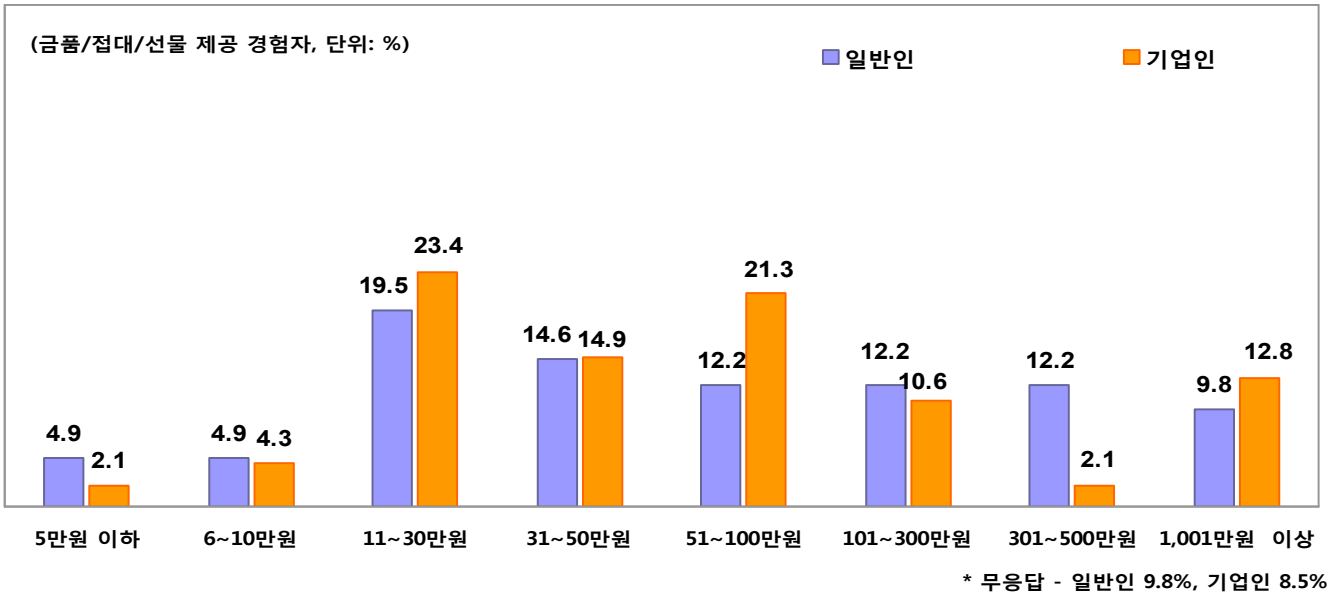
(단위: %)

조사대상		건축, 주택, 토지	경찰	보건, 위생, 의료	교육	세무/관세	노동/고용	소방	검찰, 출입국 관리 등 법무	국방	조달	환경	외교	행정
일반국민	'10년	31.6	13.2	5.3	13.2	13.2	-	-	10.5	5.3	2.6	2.6	5.3	-
	'11년	36.6	29.3	24.4	22.0	17.1	7.3	7.3	4.9	2.4	2.4	2.4	-	-
	전년 대비 (%p)	+5.0	**+16.1**	**+19.1**	△10.8	+3.9	+7.3	+7.3	△5.6	△2.9	△0.2	△0.2	△5.3	-

□ 금품·향응 등 제공 규모 및 빈도(일반국민, 기업인)

○ 지난 1년간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한 규모로는 '11~30만원'이 일반국민(19.5%), 기업인(23.4%) 등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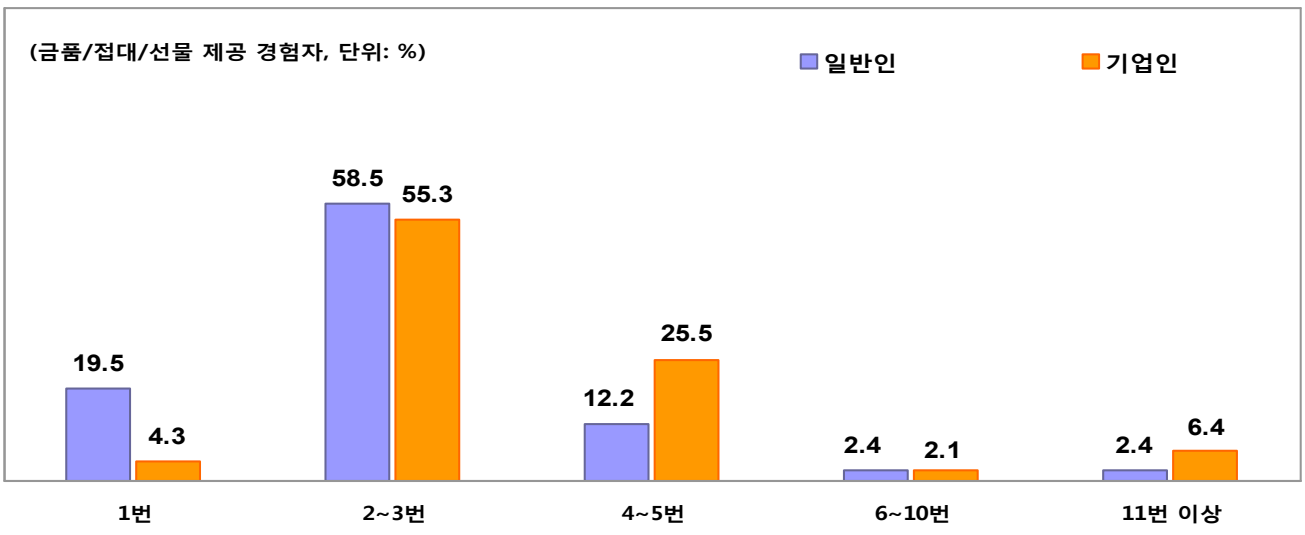
〈 금품 등을 제공 규모 〉



* 무응답 - 일반인 9.8%, 기업인 8.5%

○ **일반국민·기업인 모두** 지난 1년간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한 횟수는 '2~3번'(58.5%, 55.3%)이 가장 많았음

〈 금품 등 제공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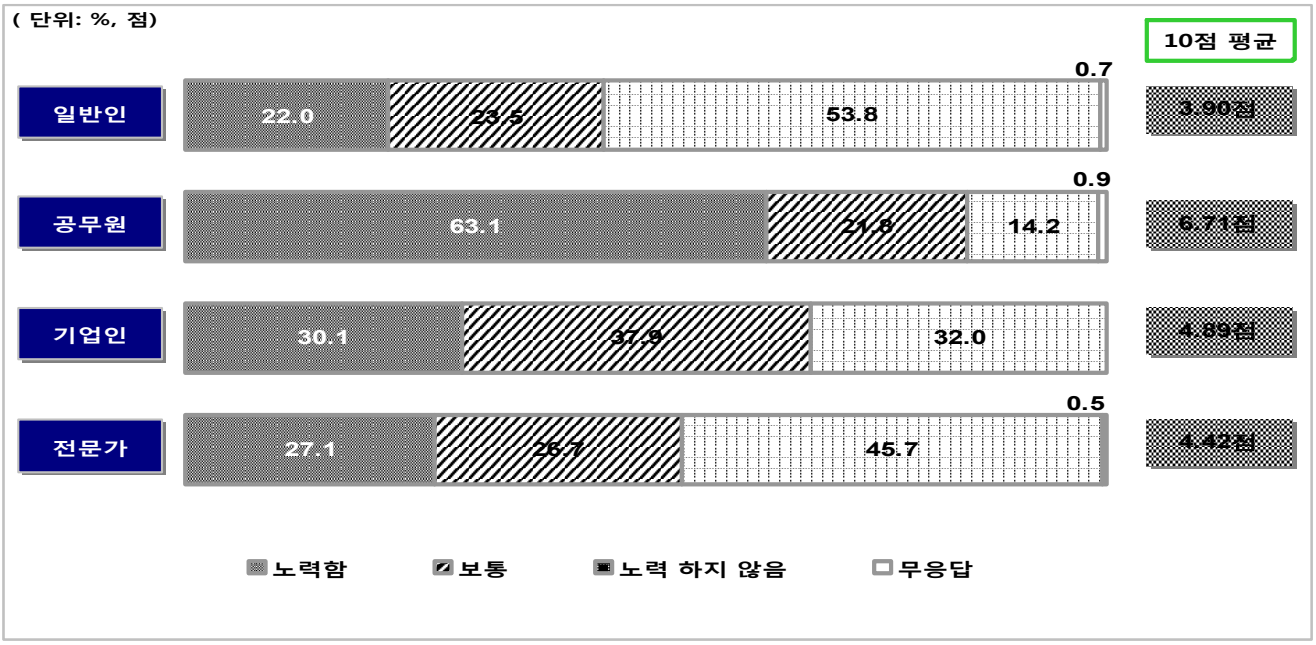
* 무응답 - 일반인 4.9%, 기업인 6.4%

Ⅳ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부패증감 전망

○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공무원 등은 전년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문가는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



○ 향후 부패실태에 대해 일반국민은 전년 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공무원은 비슷한 수준

-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49세 이하 연령층(19.9%)에서 50세 이상(30.9%) 보다 낮게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미래 전망이 부정적

〈 부패증감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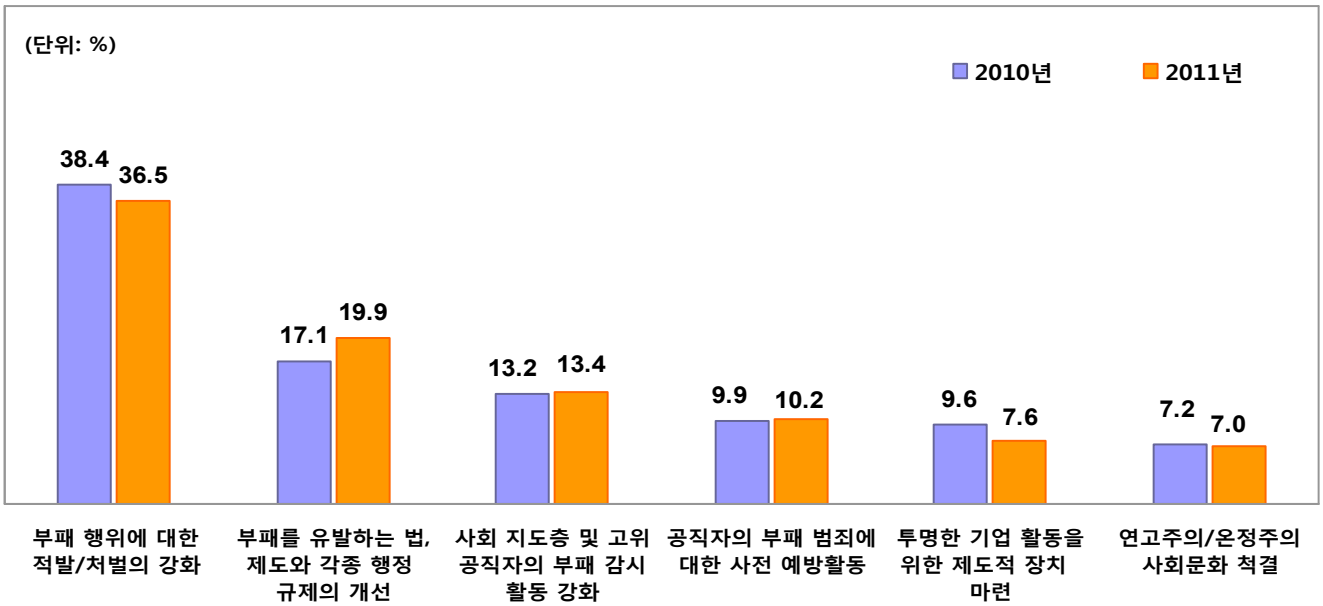
(단위: %)

항 목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외국인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부패증감 전망	감소할 것	33.9	24.0	69.9	69.4	31.7	42.9	22.5	31.5
	증가할 것	17.0	27.3	2.4	3.6	26.2	15.4	16.0	11.5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일반국민,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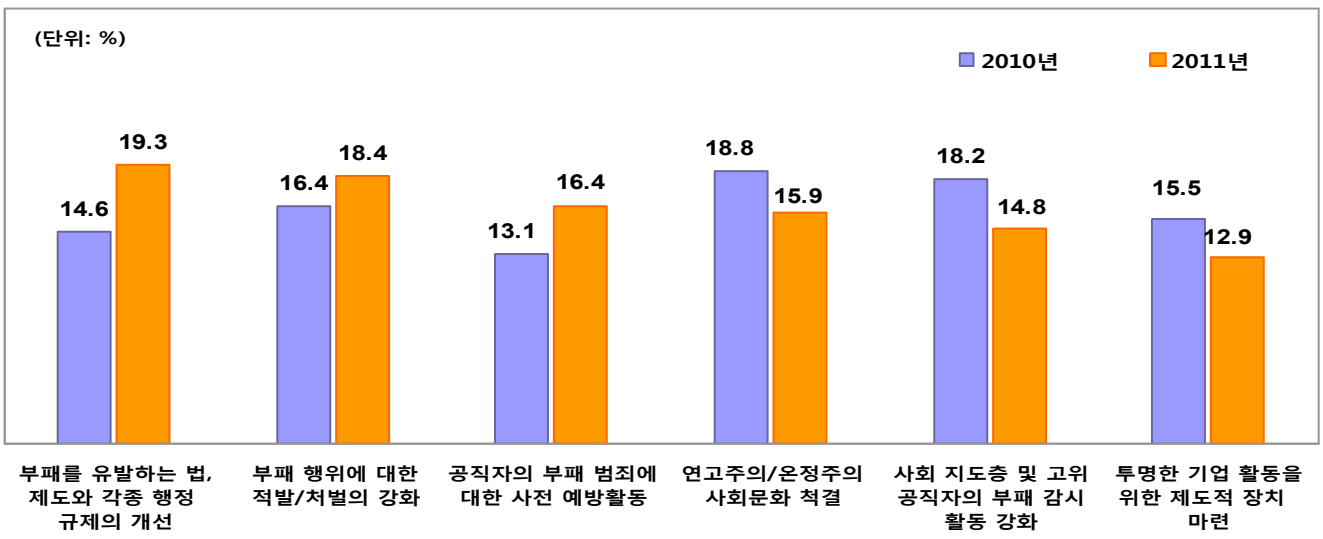
○ 일반국민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6.5%)**를 드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다수**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 공무원은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19.3%)**과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18.4%)** 등 각 종 의견을 고르게 꼽고 있음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Ⅷ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부패인식) 공직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일반국민·공무원 인식**은 **악화**되었으나 **기업인과 전문가**의 **인식**은 **개선**
- (부패경험) **일반국민**의 **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소폭 악화** 되었으나 **기업인**의 부패경험률은 **대폭 개선**
- (정부 정책의 투명성) **기업인·전문가** 등은 기업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부패인식

○ **일반국민**은 **공직(56.7%)**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65.4%)**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

- 추세로 볼 때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음

※ 59.1%('08년) → 56.6%('09년) → 51.6%('10년) → 65.4%('11년)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게 된 **이유**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경험에 기초한 판단**보다 **매스컴의 영향(63%)**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금품·향응 제공 경험은 2.9%**에 불과하여 부패**인식과 경험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

※ 실제 부패경험이 없더라도 **공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등 더 높은 **공직 윤리와 청렴의무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

-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33.3%)**을,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공직자(23.3%)**를, 부패유형으로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각각 응답하여 중앙부처의 **정치인·고위공직자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

○ **공무원**은 우리 사회 전반(15.1%) 및 공직사회(2.9%)의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보다 **관대하게 평가**

- 또한 스스로 청렴하다고 느끼는 공무원이 94%에 달해 일반국민(63.7%)과 큰 차이를 보임

※ **공무원의 부패수준 인식(2.9%)**과 **일반국민의 부패경험(2.9%)** 사이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은 **금품·향응 수수만을 부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

○ **기업인·전문가**의 **우리사회** 및 **공직**에 대한 **부패인식**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에 대해 **대형 부패사건이 감소**(기업인 40%, 전문가 33.3%)하였고, **공직사회의 윤리성·책임성·투명성**(기업인 33.3%, 전문가 31.3%) 등이 높아진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

- 다만 **기업인**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5.4점, 43위)에 비하여 실제 우리나라가 **더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7.4%**에 이르러 국가청렴지수(CPI)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소적인 입장을 유지

□ 부패경험

○ **일반국민**의 **금품/접대/선물 제공경험(2.9%)**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08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기업인 : 19.3%('08년) → 14.7%('09년) → 11.1%('10년) → 6.7%('11년)

○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 연령층에서의 **부패경험(6.4%)**이 많이 나타남

○ **직업별**로는 **고용주(10.5%)**, **자영업자(8.3%)**, **기업임원(6.7%)**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득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7.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업무별**로는 **'건축/주택/토지'**분야가 **일반국민**의 **부패인식(77.3%)** 뿐 아니라 **경험(36.6%)**에서도 **가장 부패가 많은 업무분야**로 확인

- **기업인**은 **세무/관세** 분야에서도 **부패경험(36.2%)이 높게 나타났음**

※ 일반국민·기업인 모두 직·간접적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부패경험이 높게 나타남

○ 금품의 제공 **규모나 빈도**를 볼 때 대부분 **소액(30만원 이하)**을 **여러 번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국민의 생활 또는 기업인의 경제활동에서 **소규모 관행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

○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하는 동기로는 **공무원**의 **직접 요구**보다 **원만한 관계(기업인 34%)** 유지를 위해 또는 **관행적(일반국민 36.6%)으로 하게 되었다고 응답**

□ 정책 투명성

○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기업인(27.1%), 전문가(47.3%)**는 투명성이 **낮다고 평가**

- 부정적 평가 이유에 대해 **정책 형성과정이 불공정(기업인 43.2%)**하고 **정보공개가 미흡(전문가 43%)**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특히 **정부정책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게 된 것에 대해 **전문가**는 **평소 생각(44%)**에 비추어 라고 하였으나, **기업인**은 **매스컴의 영향(38.9%)**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인은 **기업관련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성이 어렵다(42.3%)**는 평가가 많았고, 우리 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이 낮다**는 **평가(24.3%)가** 높다는 평가(21.3%)보다 많이 나타남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일반국민**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6.5%)**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13.4%)**가 중요하다고 인식

※ 반면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연고·온정주의적 문화 개선**을 지적하는 **비율이 낮아**(7%) 부패문제를 **공공부분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공무원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19.3%)**과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18.4%)** 등을 꼽고 있음

○ **일반국민**은 향후 **부패 전망**에 대해 **부패 증가(27.3%)** 의견이 감소(24%) 의견보다 **많이** 나타나 **부패 전망**이 다소 **비관적**

- 특히 **49세 이하 연령층(19.9%)**에서 50세 이상(30.9%) 보다 **많이**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미래 전망이 비관적**